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13.(수) 조간	담당부서	대학학사제도과
배포일시	2017. 12. 12.(화)	담당과장	강병구 (044-203-6252)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박재희 (044-203-6255) 주무관 강무송 (044-203-6256)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점검 등 결과 발표

-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시 투명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2.13.(수)에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하여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대상 법전원은 총 8개교*(국립 5개교, 사립 3개교)로 '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2017. 9. 4(월) ~ 11.1(수)까지 실시하였다.

* (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사립대)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

○ 특히,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 A대 학(2건), B대 학(1건), C대 학(1건)

-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 시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우수사례) D대학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출신 대학명 기재 시 감점조치

【블라인드(무(無) 자료) 면접 이행】

-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서류평가 관련】

-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 1개 대학은 학생의 출신대학을 알 수 없도록 대학 로고가 표기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 반면, 2개 대학은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 B대학(지원자 성명 및 부친 성명 노출 1건, 지원자 성명 노출 1건), C대학(지원자 사진 및 모친 성명·직업 노출 1건)

【정량평가 비율 준수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 이행】

-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고 있었다.

* (교육부 기준)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률 비율 6:4 (1단계 전형 기준)

【선발결과 공개 관련】

-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 장학금 지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점검 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 등록금 70% 이상 차등 지원

- 그러나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 F대 학 : 소득분위 선정 미신청자 및 7~10분위자에게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 지급(102건 중 11건)
 G대 학 :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118건 중 1건)
 H대 학 :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138건 중 27건)



□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하여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재희 사무관(☎ 044-203-62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25개] 및 정원[2,000명] 현황

권역	인가대학 수 (배정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09학년도 이후)	비고
서울 권역	15개교 (1,140명)	건국대	40명	
		경희대	60명	
		고려대	120명	
		서강대	40명	
		서울대	150명	
		성균관대	120명	
		서울시립대	50명	
		연세대	120명	
		이화여대	100명	
		중앙대	50명	
		한국외대	50명	
		한양대	100명	’17년 점검
		아주대	50명	
		인하대	50명	’17년 점검
		강원대	40명	
대전 권역	2개교 (170명)	충남대	100명	’17년 점검
		충북대	70명	
광주 권역	4개교 (300명)	전남대	120명	
		원광대	60명	
		전북대	80명	’17년 점검
		제주대	40명	’17년 점검
대구 권역	2개교 (190명)	경북대	120명	’17년 점검
		영남대	70명	
부산 권역	2개교 (200명)	동아대	80명	’17년 점검
		부산대	120명	’17년 점검